

구속 상태 ‘탄핵심판’... 수사 거부엔 ‘강제인치’ 가능

구속수감尹, 향후 조사 전망

공수처 구속후 첫 소환에 ‘불응’ 10일 이내 검찰 송치 늦춰질 듯 현재, 21·23일 3·4차 변론 진행 검찰·교정당국 등 협의 예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현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한 후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재통보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에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팀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또는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방문 조사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좀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 수사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에 비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19일 서울구치소로 카니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당일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스시스**

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체포 직후 첫 조사에는 응했지만, 그 이후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추가 소환은 모두 거부했다. 첫 조사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만 전달한 후 공수처 수사팀의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영장 집행에 맞섰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여기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세운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관할 법원과 내란 수사기관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기소권이 없는 대상을 구속할 경우 법원에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도 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과 협의된 것보다 더 늦게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와 대검은 구속기한을 추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나선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

정돼 있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및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에 진행한다. 현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탄핵심판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현재는 3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이미 열람해 확인한 증거의 경우 증거조사를 대체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CCTV 영상은 심판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장소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곳이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주변을 경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 당시 국회 측이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뒤 진행될 예정인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이다. 또, 조 청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스시스**

주요 외신, 긴급 타전... “현직 대통령 처음”

로이터 “공수처 조사노력 방해” AP “지지가, 불안 분위기 조성”

주요 외신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며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한국 수사관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그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 노력도 방해해 왔다”며 “그가 장기간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P는 “윤 대통령의 체포는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구속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 수십 명이 난입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썼다. 르몽드는 AFP를 인용해 “국가원수를 구속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검찰에 내란 혐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 준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무기징역 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기소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은 재판 동안 구속될 가능성 있다는 의미”라고 해

석했다. 신화통신은 “한국 법원은 계엄 시도 실패 뒤 탄핵(소추)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NHK도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스시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24타경 5497	1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244 3428㎡ 제1외의 창고 등 62.94㎡ 기계기구 표고버섯배지살균설비의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312 1층814.32㎡ 2층546.06㎡ 무숙건물 창고1층686.07㎡ 2층461.01㎡ 단층227.25㎡ [물건번호1:제1외건물포함 과공정담당제6조기계기구 [특별보통가등소재물명, 강정평가서참조] 포함, 표고버섯배지살균설비등매각제외 [확인불가, 강정평가서참조]	공업	2,193,574,220 2,193,574,220	2,193,574,220	일괄매각, 냉장냉동 컨테이너1동 제외, 목욕1현황공공장근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항후현상회복명령해제가능성인 안양면정사실조회화신서참조]
2024타경 5596	1	장흥군 안양면 신촌리 220 430㎡ [공유자선속구1/2지분전부]	대	14,859,000	14,859,000	일괄매각, 목욕1지분,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4타경 5855	1	장흥군 안양면 신촌리 221 334㎡ 동소 221 단층 16평 무숙건물 단층 창고17평 제1외의 창고등69㎡ [물건번호2:제1외건물포함]	대	19,579,230 19,579,230	19,579,230	일괄매각, 단층창고 17평, 목욕, 주택관리지분으로개조
2024타경 5855	1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321-10 297㎡ 동소 321-10 1층88㎡ 2층84.85㎡ 제1외의 사무실등28㎡	대	194,350,000	194,350,000	일괄매각, 제1외건물, 유실수포함
2024타경 195	2	장흥군 장평면 두물리 1105-2 1116.9㎡	대	23,454,900	23,454,9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4타경 5572	1	강진군 마량면 상촌리 801-13 1925.4㎡	대	43,128,960	43,128,96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매각조건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2.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 2. 매각기일 : 2025. 2. 3. [월] 10:00
- 3. 매각결정기일 : 2025. 2. 10. [월] 11:00
- 4. 매각장소 : 장흥지법 입찰(제2호법정)
- 5. 매각방법
 1. 입찰방법에 비하면 가압입찰로써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입찰 보증서]을 준비해야 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해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4.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1.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2.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은 지정된 날의 3일정도의 총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면이자, 비용 등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7. 소유권이 및 인도

2025. 1.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